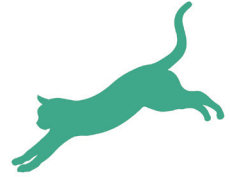


2020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활동
사례집







우리나라는 자타가 공인하는 토건 국가로 크고 작은 개발과 건축행위가 끊이지 않는다. 수많은 사람이 집을 잃거나 이주를 해야 하는 막대한 골목에 물리는 한편 다른 사람들은 큰 부를 획득하기도 한다. 허술하고 성급하게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인간사의 복잡다단한 과정에서 간과된 소중한 가치들이 어디 한두 가지일까. 나무를 잘라내고 집과 건물을 부수어 새로 짓는 과정 속에서 막대한 건축 폐기물이 발생하고 새들은 동지를 잃으며 유령처럼 살아가던 길고양이들은 생존마저 위협받는다.

도시 길고양이 개체군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그들과 맺고 있는 상호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그들이 겪는 모든 일은 사안을 다루는 우리들의 모습과 능력치를 반영한다. 그래서 재개발 공사 현장을 고향으로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길고양이들의 보호 대책 마련은 우리 삶과 무관하지 않다. 분명히 실존하지만 부정되어 온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보호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는 일은 침묵하는 약자를 돌아보는 당연한 과정을 비로소 소환해 냄으로써 우리 사회의 안녕을 증진하고 품위를 유지하게 할 것이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의 길고양이 보호 활동은 길고양이 생태에 근거하여 다수 스테이크 홀더의 합리적인 협업을 거쳐 진행되어야 한다. 동물들은 지각력 있는 존재로서 환경과 상황에 반응하고 판단하며 생을 영위해 간다. 뛰어난 지력과 신체 능력으로 척박한 도시 환경에도 생존해 온 길고양이들이지만 재개발로 인한 급격한 서식 환경의 변화와 영역 자원의 소실은 감당키 어렵다. 따라서 재개발과 재건축은 그 자체로 대규모의 구조적 동물복지 침해 사건이 되고 만다. 이것이 동물권행동 카라가 재개발지역 길고양이 이주와 보호 대책에 동물권 단체로서 6년여 전부터 천착해 온 주요 사유이다.

고양이는 관찰을 통해 습득한 정보를 이용, 가장 가까운 가장 적합한 곳으로 천천히 영역을 이동하거나 확장해 나가며 살아간다. 재개발의 급격한 변혁을 완충해 주면서 그들이 판단해 위험지역을 탈출해 나갈 수 있도록 이동 예정 지역 쪽으로의 밥자리 이동 활동은 단순하지만 매우 결정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다. 또한 영역 축소 또는 소실로 인한 충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재개발지역 길고양이 보호 활동에 있어 개체 수 조절을 위한 광범위한 TNR의 실시는 당연한 기본값이다. 입양 가능한 아기 고양이와 사람에게 친화적인 유기묘들은 TNR의 기본 원칙에 따라 구조나 입양을 통해 개체군에서 제외시키는 게 이상적이다. 재개발지역 이주는 길고양이 본연의 행동 습성이 확실한 소위 자생력 있는 야생 고양이들에게도 힘든 진짜 생존의 현상이기 때문이다.

우리 작은 이웃, 길고양이들의 성공적 이주와 생존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재개발조합은 길고양이 이주와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고 건설사의 이후 건설 일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청은 시공사와 조합이 안전한 건축을 하면서 동물들의 안전도 고려하도록 공식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동물단체는 길고양이 이주의 과학적 방법과 실행을 자문하고 조력하며 관청과 조합 시공사의 협업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아주면 좋을 것이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핵심적 스테이크 홀더는 케어테이커들이다. 평소 길고양이 개체군을 관리 관찰하며 보호해 온 케어테이커들은 길고양이를 안전한 장소로 움직이게 할 유일한 존재다. 피리부는 사나이가 되어 생명의 길로 길고양이들을 불러올 수 있는 그들, 온갖 책임을 다하려는 그들의 활동은 올바로 평가되고 지원되어야 한다.

이 사례집을 발간하게 될 즈음 기쁜 소식이 들려온다. 재개발지역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조례를 최초 제정한 서울시에서 근린공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의 근거를 마련했다. 몇 해 전 개포동 이주 활동 당시 근린공원에 급식소 하나 놓는데 관청과 일부 주민이 왜 그렇게까지 인색해야 했는지 회상해 본다. 어쨌든 서울시 재개발지역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과 이주 활동 지원 실무를 진행했던 카라로서는 이만한 진전도 큰 보람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험한 재개발 지역의 골목에 누비며 적극적이고 과단성 있는 활동을 진행해 준 카라 활동가들, 그리고 오랜 시간 길고양이들의 보호자임을 자처한 텃(?)에 힘들고 희생적인 이주 활동을 감당해야 했던 케어테이커분들 덕분이다. 그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바친다. 그대들의 헌신과 용기 덕에 수많은 길고양이가 지금도 삶을 이어가고 있다.

4월 22일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전진경

1

길고양이의 현실과 보호조치로서 '이주'의 필요성

2021년 1월 현재 서울시의 관리처분인가 단계의 재건축 지구는 31개소, 재개발 지구는 25개소에 달한다. 서울시의 자치구가 모두 25개이니, 한 구당 2개 지구에서 도시정비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우리 주변 곳곳에는 길고양이가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서울시 내에서만 2019년 기준 11만 6천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영역동물인 고양이들은 오로지 사람의 편의를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대규모 도시정비 사업들로 인해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사라지면서 영문도 모른 채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서식지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갑작스러운 영역 상실은 로드킬 사고를 빈발시키며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어미 고양이와 새끼들은 건물이 무너지는 순간에 탈출을 하지 못해 매몰되기도 한다.

이는 원인 제공자인 인간이 무책임하게 생명을 외면하는 행위로 동물보호 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길고양이와의 공존을 지향하며 국가 정책으로 도입된 TNR(Trap-Neuter-Return) 제도 본연의 의미 또한 퇴색시킨다. 서울시는 매년 약 11,000마리의 길고양이 중성화를 지자체 TNR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동물보호단체와 케어테이커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중성화 마릿수는 집계하지 않은 수치이다.

도시정비 사업은 급식소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중성화 수술로 개체 수 급증을 막고 영역 고양이들의 정착을 모니터링하며 공존을 모색하고 있는 케어테이커들에게 자신들이 돌보는 동물의 생

1. 재개발사업 절차는 크게 ①계획수립, ②사업시행계획, ③분양 및 관리처분, ④사업완료 등 4개 단계로 나뉜다. 본 사업은 문제의 규모를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③단계에서의 '관리처분인가' 이전에 속하는 지역으로 대상지를 한정하였다.

명을 위협하는 한편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실로 엄청난 변수이다. 끊임없이 대형 재개발 사업이 길고양이의 목숨을 앗아가는 상황은 공존의 근간 자체를 뒤흔드는 것으로 대책이 시급하며, 서식지에서 내몰린 길고양이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이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영역동물인 길고양이의 이주는 단순한 '이동' 개념이 아니다. 새로운 서식지에서 길고양이의 생존과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첫째, 영역 동물의 회귀 본능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둘째, 이주하는 서식지가 급식소의 존재, 기존 고양이들의 밀도와 중성화 등 생존에 적합해야 하며 셋째, 이주를 감행하는 주체인 길고양이가 건강할수록 좋고 번식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에 2020년 동물권행동 카라와 서울시는 도시정비구역의 길고양이를 보호하는 시범사업을 전개하였다. 관리처본인가 이전 단계의 재개발·재건축 지구에 서식하는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집중 TNR을 실시하고, 체계적 계획에 따른 길고양이 근거리 이주를 추진하며 필요시 구조·입양 등 각 개체에게 적합한 지원을 최대한 도모하는 활동이었다.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는 안 그래도 험난한 길 생활에 더하여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에 치료 지원을 병행하여 길고양이 이주가 개체 복지를 증진하며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 시범사업은 당장 재개발에 맞닥뜨린 현장을 지원하는 한편, 재개발을 앞둔 지역의 길고양이 보호 활동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도시정비구역의 길고양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 마련에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현실적 제약 극복해 나가기 - 방법과 유의점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 활동의 목적과 기본 방향

재개발지역 길고양이 보호 활동의 목적

- 재개발·재건축 지구에 서식하는 길고양이와 이주 예정지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집중 TNR을 실시하고 재개발·재건축 지구 길고양이를 안전한 곳으로 이주시킴으로써 도시정비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길고양이 생존 위협 및 복지 훼손 문제의 심화 예방
-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동물들의 생명도 존중하는, 생태 친화적 재개발·재건축의 올바른 사례 제시
- 조합, 건설사, 관공서, 시민, 동물보호단체, 케어테이커가 각자의 영역에서 동물의 생명이 존중된 도시정비구역의 사례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하며 공동의 노력 실현

재개발지역 길고양이 보호 활동의 기본 방향

- 동물보호법과 TNR의 모든 원칙 충실히 지키기
- 고양이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다수의 고양이에게 최선의 복지 확보하기
- 조합, 건설사, 관공서, 시민, 동물보호단체, 케어테이커의 협력 하에 고양이들이 실질적으로 생명을 보호 받도록 꾸준히 노력하기
- 케어테이커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안전한 곳으로 이주 후에도 해당 고양이들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 활동은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고, 개별 케어테이커가 홀로 감당하기에 그 규모가 너무 커 좌절하기도 한다. 특히 길고양이의 경우 그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동물보호단체나 길고양이와 유대관계를 갖고 돌봄 활동을 해 온 지역의 케어테이커 등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당면 문제를 해결해 왔으며 관(官)의 적극적인 역할은 사실상 부재하다. 오히려 관공서마저도 동물보호 담당 부서를 벗어나면 길고양이에 대한 인지도가 현저히 떨어져 협조를 위한 설득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인식의 결여와 제도적 장치의 부재는 곧 이해관계자의 비협조로 귀결된다. 경제적 수익성으로 움직이는 조합과 건설사의 입장에서 동물보호 활동은 사업의 진행을 더디게 하는 장애물이자 재개발 사업지 내에서 케어테이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성가신 일이 되기도 한다. 지역 케어테이커는 재개발 사업지 출입에 있어서조차 민간 동물보호단체에 도움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한편 신청해도 언제 얼마나 가능한지 불투명한 현행 지자체 TNR 제도는 집중 TNR이 시급하게 필요한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 활동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현실이다.

길고양이에 대한 몰이해에 더하여 재개발 등 도시정비구역 사업 시 동물보호 지침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지금까지는 관할 지자체, 조합, 건설사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재개발 때문에 죽어가는 생명에 대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즉,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 활동은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기 어려운 여건 속에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길고양이 '이주'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준비하고 이에 따라 실행을 해나가면 이대로 방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 해결해야 하는 과제의 규모가 크고 언제든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기에 지역 케어테이커들이 같은 목표 하에 움직이는 공동 활동을 권장한다. 사람들이 이주해 나간 공사 현장에서 케어테이커의 안전을 위해서도 공동 활동은 필요하다.

“ 의료 지원 및 보호 활동의 세부 내용과 근거 ”

활 동	근거와 목적
적극적인 TN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가오는 발정기 개체 수 증가 억제 • 중성화를 통해 낫선 개체들과의 영역 싸움 피해 최소화 • 미숙한 새끼와 임신 수유중인 어미의 피해 최소화 • 발정기 스트레스 및 수컷들의 싸움 방지 • 먹이 의존도를 높임으로써 먹이를 이용한 안전지역으로의 서식지 이동에 도움
예방접종 (범백, 칼리시, 허피스, 광견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트레스와 영역 이동 상황에서 질병에 대한 저항력 향상 • 개체군 이동시 질병 발생 우려 감소 • 개체군의 집단 면역 확보 •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으로 지역 공중보건 향상
구내염 등 질병치료와 내외부 기생충 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내염, 외상 등 고통을 초래하고 개체의 복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질병을 치료함으로써 스트레스 저항력 강화 • 구내염 전염 방지 • 내외부 기생충 구제로 기초 건강 및 공중보건 확립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은 고양이 입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존 가능성 희박한 어린 개체 등 영역 이동 스트레스를 견딜 수 없을 것으로 추측되는 개체의 구조·입양 등 보호
혹은 보호 활동 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개발 지역 내 고양이 개체 수 감소와 개별 고양이 보호 • TNR 또는 질병치료 후 방사된 개체 및 입양 개체 전원에 대한 마이크로칩 치핑으로 개체 식별 및 개체 수 파악

“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이주 활동 순서 ”



1. 서식 현황 조사

- 재개발 예정지의 길고양이 서식 현황이 대략적으로나마 파악되어야 함
개체 수, 증성화율, 급식소와 해당 케어테이커, 기타 특이사항 등
- 지역 케어테이커들과 소통 시작, 개체 식별 및 개체 수 파악

2. 일정 계획 수립

- 재개발 사업지의 정확한 위치와 범위 및 어느 단계(특히 철거와 착공 시기)에
와있는지 확인
- 이해관계자 확인 및 접촉
- 철거 시작 전 길고양이 이주가 완료되도록 일정 계획 수립



3. 이주 예정지 찾기

- 길고양이 '스스로 근거리 이주 우선 원칙'에 따른 안전한 이주 예정지 탐색
- 이주 예정지 길고양이 서식 현황 및 급식소 조사
- 필요시 이주 예정지의 케어테이커/관공서 소통 및 이주 예정지 확정



4. 급식소 이동 시작 및 집중 TNR

- 근거리 이주를 위한 급식소 위치 이동경로 설정 및 일정 계획에 맞춘 실행
- 재개발 사업지 및 이주 예정지 대상 집중 TNR 실시: 근거리 이주 시에도 '제
자리 방사' 원칙 준수
- 이해관계자 소통 및 자원 활용: 케어테이커 출입 협조, 계류 공간 협조, 필요
시 고양이 출입문 협조 등



5. 이주 완료 및 모니터

- 철거 시작 전 길고양이 이주 완료 목표로 활동
- 새로운 서식지 정착 모니터



“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이주 활동의 주요 개념 ”

· 도시정비구역_집중 TNR

안정적인 급식소 관리를 전제로 한 TNR은 원래 길고양이의 번식을 예방함으로써 길 위의 고통을 감소시키는 한편 길고양이들 간 영역 다툼을 줄이며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하여 삶을 영위하도록 돕고자 하는 맥락이다. TNR은 재개발 사업 예정지에서도 매우 중요한데 이는 궁극적으로 이주 대상 길고양이 개체수와 직결되며, 정착 이주를 감행해야 하는 시기에 고양이와 출산과 육아 중에 있으면 성공적인 이주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중성화율이 높은 편이라 하더라도 재개발 예정 지역은 집중 TNR을 필요로 하며, 평시 TNR은 이주가 임박한 시기 집중 TNR의 부담을 덜어준다.

· 이주 예정지_집중TNR

도시정비구역의 집중 TNR은 재개발 예정지 내에서 뿐만 아니라 재개발로 서식지를 잃게 되는 길고양이들이 이주해서 가야하는 인근 이주 예정지에서도 시행되어야 한다. 이주 자체가 어렵사리 이뤄져도 이주 예정지의 길고양이 TNR이 안되어 있으면 새로운 서식지에서 개체 증식이 일어나고 영역 다툼이 예고되는 등 결과적으로 이주 후 길고양이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다양한 변수에 대한 대응책의 필요성

이주는 길고양이가 건강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것이 가장 좋으며 TNR과 예방접종, 구충까지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데 포획된 길고양이가 TNR 외에도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비용 총당이 필요한 경우, 치료를 해도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아 제자리 방사가 불가능한 경우, 출산에 임박했거나 출산에 막 들어가 새끼들에 대한 돌봄과 입양이 필요한 경우, 유기된 고양이처럼 재개발 지역에 버려진 지 얼마 안 되어 입양이 필요한 경우 등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활동은 실로 다양한 경우에 맞닥뜨릴 수 있는 만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혼자가 아닌 지역 케어테이커들 간 결속은 이 때문에 권장되며, 재개발 예정지의 공가(空家)는 집중 TNR 시 임시 계류 공간, 혹은 모를 돌봄 장소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

· 길고양이 ‘스스로 근거리 이주 우선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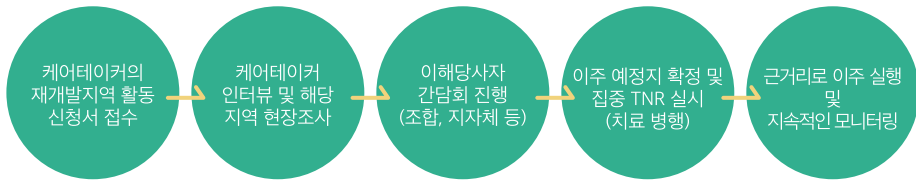
영역동물인 고양이의 회귀 본능을 고려할 때 포획 후 이주 예정지에 바로 방사하는 강제 이주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생존율 또한 낮다. 최근 일각에서 길고양이 혐오 민원에 입각하여 무단 포획하여 제자리 아닌 장소에 멋대로 방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이주가 아니라 잘 살고 있던 고양이를 다른 곳에 옮겨 동물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동물학대 행위임을 밝혀둔다.

‘급식소 이동’을 통하여 시간을 두고 길고양이 스스로 이주 예정지 방향으로 서서히 이동 하게끔 유도하는, 비강제 근거리 이주 방식은 여건이 허락하는 한 가장 안전한 이주 방법으로서 권장된다. 이는 평소 해당 고양이의 영역 활동에 이주 예정지를 각인시켜 놓음으로써 기존 서식지에 위험 상황이 닥치면 해당 고양이는 학습된 이주 예정지로 자발적 이동을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급식소 이동을 통한 근거리 이주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최악의 조건에서는 이주 예정지에 ‘계류장’ 운영을 통한 ‘포획 - 계류장 계류 - (계류장 문을 열어) 방사’라는 차선택이 고려되지 않을 수 없는데, 강제 이주인 만큼 새로운 이주 예정지에서 적응 시간을 갖기 위함이다. 이 경우 계류장 장소 물색과 설치 및 돌봄과 관리, 계류장 철거 등 여러 세부사항이 뒤따라야 한다.

3

2020 서울시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 시범사업 소개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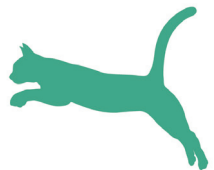
동물권행동 카라의 주관으로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서울시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 시범사업에서는 총 6개의 도시정비구역 내 사업지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 케어테이커들과 함께 길고양이 이주 활동을 실시하였다.

2020 서울시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 시범사업은 카라가 본 사업을 알리며 재개발/재건축 예정 지역의 길고양이를 돌보고 있는 지역 케어테이커들의 신청을 접수 받으며 시작되었다. 접수된 신청서를 기반으로 현장조사와 케어테이커 면담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케어테이커들의 의지, 소통, 단결력을 확인하는 한편 철거가 임박하여 도움이 시급히 필요한 사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업지 선정이 이뤄졌다. 카라는 현장조사를 통해 이주 예정지의 적합도를 평가하였고 케어테이커들과 상의하여 급식소 이동을 통한 근거리 이주 경로를 설정, 근거리 이주의 실행을 지원 하였다.

조합, 지자체 공무원, 케어테이커 그룹과의 간담회를 통해 과제의 목적과 내용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 토론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간담회를 통해 서로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였고 그 후, 현장에 투입해 집중 TNR을 진행하였다.

TNR 후에도 케어테이커들의 지속적인 길고양이 돌봄과 관리는 필수적이며 일상에서 근거리 이주를 조금씩 실행하는 것도 케어테이커의 역할이다. 중성화 수술 후 고양이의 건강 상태 확인은 물론 깨끗한 급식소 관리와 정기적인 밥 주기와 급식소 이동, 고양이가 나타나는지 확인 및 이동하는 급식소를 잘 따라오고 있는지 등 지속적인 관찰과 돌봄을 해야 한다.

한편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단계에 따른 전략이 요구된다. 철거 전까지 TNR과 급식소 이동을 통한 각인이 이뤄지는 것이 제일 좋다. 만약 철거 직전의 상황이라면 TNR과 함께 급식소 이동을 서둘러야 하고 시간이 없다면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 같은 활동이 이해 당사자의 협조 속에 병행될 수 있다. 시간을 놓쳐 길고양이 ‘스스로 근거리 이주 원칙’을 각인시킬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라면 최후의 수단으로서 계류장 계류를 통한 강제 이주 방법이 있다.




“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활동 참가 신청서 ”

동물권행동 카라

2020 서울시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 활동 시범사업 참가 신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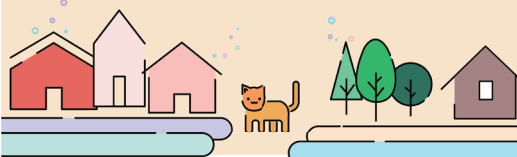
신청자	<input type="checkbox"/> 재개발 <input type="checkbox"/> 재건축		신청자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단체 (명)	
	성함	연락처	주소		
	(단체의 경우 대표자 포함 2인의 정보 기재)				
현장 주소 및 규모	(재개발/재건축 구역, 위치, 규모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역을 표시한 지도 첨부 필수) 예시. 000구 00제1구역, 00동 000번지 일대)				
재건축/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개체수	총 () 마리	중성화 수술 완료 개체수	() 마리	암: () 마리	수: () 마리
	암: () 마리	중성화 수술 필요 개체수	() 마리	암: () 마리	수: () 마리
제자리 방사 여부	<input type="checkbox"/> 가능 <input type="checkbox"/> 불가능 (사유:)				
	<input type="checkbox"/> 일부 불가능 (사유:)				
수술 후 병원계류 불가 시 계류공간 유무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형태	<input type="checkbox"/> 공가 <input type="checkbox"/> 컨테이너	
	<input type="checkbox"/> 케어테이커의 집 <input type="checkbox"/> 기타				
지역 현황	(지역민들 이주 종료시점과 재개발/재건축 진행 상황, 지역특수성 등 자세한 내용)				
이주 대상 지역 길고양이 중성화율	총 () 마리	이주 대상 지역 길고양이 급식소 유무	<input type="checkbox"/> 유 (개) <input type="checkbox"/> 무		
	완료 () 마리	이주 대상 지역 케어테이커 유무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협력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가능 <input type="checkbox"/> 불가능
이주 계획	TNR을 통한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길고양이 이주를 위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네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TNR을 통한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길고양이 이주를 위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설명회에 참여하시겠습니까?				<input type="checkbox"/> 네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이주 계획	(건설사, 재건축 조합 등과의 협업 방안, 이주 계획 기간, 이주 예상 구역, 이주 방법 등 이주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서술)				
<p>○ 시행 내용 : 중성화 수술, 개체 관리를 위한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p> <p>본인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동물권행동 카라에서 진행하는 2020 서울시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활동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2020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인)</p>					

“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활동 홍보 웹자보 ”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지구 길고양이 보호활동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

서울시와 동물권행동 카라가 진행하는
“2020년 서울시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 시범사업”에 참여할
케어테이머 또는 케어테이머 그룹을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

서울시내 관내(재개발 이전 단계의 재개발·재건축 지구에서 길고양이를 돌보는 케어테이머 또는 케어테이머 그룹)

모집 기간

2020년 5월 ~ 11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지원 내용

· 교육 및 집콕 쿠폰
· 이주 대책 마련

참여 방법(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seou@ekara.org)로 접수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울시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 시범사업'으로 제출
※ 신청서는 동물권행동 카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지원 절차

신청 접수 > 개별 안내 > 현장 조사 > 사업 진행 사전 회의 > 사업 진행

문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 '서울시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 시범사업'
동물권행동 카라
전화: 0213482-0999
이메일: seou@ekara.org
홈페이지: www.ekara.org

주관 동물권행동 카라

서울시 재개발·재건축지역 이주 예정 가구의 반려동물 ‘동물등록, 중성화’ 지원해 드립니다!

동물권행동 카라와 서울시는 올해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 사업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지역 내 길고양이 TNR과 안전한 곳으로의 이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보호활동 뿐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거주하는 반려가구를 대상으로 반려동물(개, 고양이)에 대한 동물등록(100%)과 중성화수술(50%) 지원하여 동물 유기와 반려동물의 살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아래 신청자격, 지원대상, 지원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세요!

동물등록 왜 필요한가요?

2014년 1월 1일부터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 군, 구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등록을 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잃어버렸을 때를 대비함과 동시에 고의적 유기를 예방하며 유기동물 양산률을 예방합니다.

중성화 수술은 왜 필요한가요?

중성화수술은 동물의 각종 생식기 질환을 막아주고, 성호르몬으로 인한 행동문제를 예방합니다. 발정기 때의 스트레스 감소와 유실 예방, 실내 영역표시가 좋아지며 더미 또한 낫지 않는 임신 및 번식을 막아줍니다.

신청 자격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주 예정인 가구

지원 대상

① 동물등록: 해당 가구의 반려동물(3개월령 이상의 개)
② 중성화수술: 해당 가구의 반려동물(개/고양이)
*개는 4개월령 이상, 고양이는 2~3개월령 이상이어야 하며, 중성화수술 시 6개월령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반려견의 동물등록(100% 지원) · 동물등록 비용 (내역이외에 포함)
반려묘/반려견의 중성화수술(50% 지원) · 시술, 진단, 예방은 총액에서 제외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방법

① 동물 등록 및 중성화 수술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seou@ekara.org)로 제출
② 장소: 도시내 동물병원 또는 원하는 동물병원에서 동물 등록 및 중성화수술 받은 후, 진료 영수증과 청구서 내역서를 이메일(seou@ekara.org)로 제출(카라동물병원에서도 동물등록 및 중성화수술이 가능함)

모집 기간

2020년 9월 28일~11월 20일
· 신청하기 않은 경우 언제든 모집합니다.
· 지원 대상은 동물권행동 카라 홈페이지에서 다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동물권행동 카라
홈페이지: www.ekara.org
전화: 070-4780-7287
이메일: seou@ekara.org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울시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 시범사업'






도시정비구역 안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에는 많은 지식과 경험 또한 필요하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 2016년부터 재개발, 재건축지역의 길고양이 보호활동에 앞장 서 왔으며 그 경험들을 토대로 2020년에도 도시정비구역의 길고양이들을 지역 케어테이커들과 함께 집중TNR 하고 아픈 개체들을 치료하며 보호조치로서 이주를 실행함으로써 재개발로 인한 길고양이 생존 위협을 예방할 수 있었다. 다음은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길고양이 보호활동을 해보며 케어테이커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내용을 담아보았다.

1

‘이주’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곧 철거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고양이들이 항상 같은 자리에 나와서 저를 기다려요. 도저히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데, 길고양이 이주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케어테이커가 항상 같은 자리에 밥을 준다면 고양이들은 그것을 인지하고 같은 자리에서 밥을 기다리게 됩니다. 우선 재개발 예정인 원래 서식지에서 향후 길고양이들이 살아갈 이주 예정지로 적당한 곳을 찾습니다.

목표가 정해졌다면 급식소 이동 경로를 설정하여 날마다 조금씩 밥자리를 이동시키고 고양이들이 따라올 수 있게 합니다. 이동 경로에 위험한 차도가 있어서는 안되며, 밥자리 이동은 한 번에 최대 70m를 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케어테이커는 고양이들이 이동하는 밥자리를 인식하여 잘 따라오고 있는지, 낙오된 개체는 없는지 확인합니다.

새로운 밥자리에서 밥을 먹는다면 일단 성공이며, 이는 안전한 영역을 각인 시켜주는 과정이므로 고양이가 당장은 원래 머물던 곳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만, 계속 새로운 밥자리에서 해당 고양이 목격된다면 괜찮습니다. 이와 같은 고양이 ‘스스로 근거리 이주 원칙’을 통하여 자발적인 이주가 가능합니다.

Q.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바로 안전한 곳에 들면 안되나요?



사람에게 안전해 보이는 곳도 고양이의 시선에서는 낯설고 위험한 곳입니다. 영역동물인 길고양이는 강제에 의해 자신의 영역을 갑자기 벗어나게 되면 당연히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하루 아침에 인위적으로 다른 곳에 방사된 고양이는 귀소본능이 있어서 자신이 살던 영역을 찾아 이동하는 모험을 감행합니다. 이때 통행량이 많은 도로를 건너다 로드킬로 목숨을 잃거나 다양한 사고를 당할 수 있고 재개발 예정지로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곳 방사 이후 생사 여부가 불투명한 포획 후 바로 방사하는 방법은 재개발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전혀 권장되지 않습니다.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당 고양이가 밥 먹는 급식소의 위치 이동을 통해서 이주 예정지로 고양이 스스로 이동하게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Q. 어떤 곳이 길고양이 이주 예정지로 적합한가요?



이주 예정지에는 급식소가 이미 있거나 최소한 급식소를 설치할 예정인 등 고양이의 먹이활동에 적합해야 합니다. 한편 이주 예정지에 서식하고 있는 길고양이들도 TNR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새로운 장소가 길고양이가 서식하는데 TNR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재개발 예정지 고양이들이 이주에 성공하더라도 영역다툼으로 정착에 실패하는 사태가 예고되므로 이주 예정지 집중 TNR도 사업 예정지 집중 TNR과 병행 실시 되어야 합니다.

이주 예정지는 무엇보다 재개발 사업 예정지로부터 가까워서 안전하고 자발적인 근거리 이주가 가능한 곳이라면 매우 좋습니다.

**Q. 사방이 8차선 도로로 막혀 있어
고양이 스스로 근거리 이주 우선 원칙
적용이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다른 안전한 지역에 길고양이들을
이주 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개발 사업 예정인 서식지의 물리적 여건상 고양이의 자발적 근거리 이주가 불가능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적합한 이주 대상지가 있다면 차선책으로서 이주 예정지에 '계류장'을 통한 이주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영역 동물인 길고양이가 새로운 서식지에서 받게 될 충격을 최대한 완화하는 적응 기간을 갖기 위함입니다. 케어테이커는 이주 대상지에 계류장을 설치하고 1~2달 정도 계류장에 고양이를 계류시키며 먹이와 쉴 곳을 안정적으로 제공합니다. 한 공간에 계류하는 고양이들 간 친화성도 배려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계류장 문을 열어놓고 고양이 스스로 나가게 합니다. 고양이들이 나간 뒤에도 계류장 문은 열어놓은 채로 한동안 계류장 내부에 먹이공급을 지속하여 새로운 서식지를 탐색하는 고양이들에게 쉴 곳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계류장 운영은 설치 공간을 찾는 데에 1차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매일 밥과 물 급여, 화장실 청소하기, 건강상태 체크 등 많은 인력과 시간,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방사된 고양이의 새로운 서식지 적응과 생존 또한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류장을 통한 이주는 어디까지나 고양이 스스로 근거리 이주 원칙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한 차선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차선책으로서 계류장을 통한 이주를 계획할 때는 새로운 지역에 계류장 설치 및 케어테이커의 정기적 돌봄 가능 여부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 과정 또한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도움이 필요해요!

Q. 길고양이들 중 일부는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개냥이들이예요. 동네에 동물학대 의심자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동물학대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학대 사건이 발생했다면 급식소에 뿌려진 독극물, 상해를 당하거나 죽은 고양이의 사체 사진, 범행 사진, 사인 확인을 위해 부검 보낼 사체 확보 등 침착하게 증거를 모으시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학대 사건 대응을 위해서는 정황 자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관련 자료를 모으시고 자치구에 방범용 cctv와 동물학대 경고 현수막 설치를 요청하세요. 또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면 재개발·재건축 지역을 순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케어테이커 스스로의 안전도 항상 유의하세요.

사람에 너무 친화적인 길고양이들은 임시보호처나 입양처를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길고양이를 돌볼 때에는 앞으로도 길 위의 삶을 살아갈 고양이들이 쉽게 범죄의 대상이 되지 못하도록 사람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 손을 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Q. **재개발로 공사가 시작됐는데
아직 이주하지 못한 길고양이들이 있어요.
고양이를 마저 이동시켜야 하는데
공사장 출입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물 철거에 이어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었다면 안전사고 문제로 관계자 외 현장 출입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길고양이 이주는 건물 철거 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아무리 늦어도 착공 전으로는 이주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 합니다. 그러나 현장 상황에 따라서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에 둘러진 방벽에 일정기간 고양이 통로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길고양이 이주 마무리 단계에서 케어테이커의 공사장 출입이 한동안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시공사나 조합 측에 정식 협조를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 이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면 카라와 같은 동물보호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케어테이커의 신원 확인 및 현장 안전수칙 준수 등을 전제로 시공사나 조합 측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해 드릴 수 있습니다.

Q. 주변이 넓은 도로와 고가도로로 막혀있어서 길고양이 이주가 가능한 곳이 주택가 쪽 딱 하나뿐인데 유일한 이동경로 중간에 위치한 주민센터에서 임시 급식소 설치 허락을 안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당 위치의 관리자와 소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식 미비 등 여러 사유로 인해 급식소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갈등 상황에 언제든지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한시적인 임시 급식소임을 명확히 하여 이해를 구해 보시고, 도저히 설득이 어려운 경우 임시라 하더라도 고정 급식소 위치를 조금 더 불편하더라도 주민센터 앞이 아닌 뒤쪽이나 주변으로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은 길고양이들 밥 주는 시간대를 인적이 드문 저녁이나 밤으로 옮기고 고양이들이 밥을 먹은 후 케어테이커가 밥그릇을 바로 치우는 방식도 있습니다.

갈등이 첨예하고 길고양이 혐오가 심한 지역일 경우, 자치구 내 동물보호 담당 공무원을 통해 동물학대 방지 및 마을과 길고양이와의 상생의 필요성을 알리도록 협조를 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치구별 동물보호감시원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 정보마당 > 동물보호 업무부서'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급식소 이동’을 통한 근거리 이주 사례

동물권행동 카라가 철거 직전의 재개발·재건축 지역 현장에서 길고양이를 비강제적으로 근거리 이주 시켰던 사례들을 모아 정리해 보았다.

철거 이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 경우 ‘급식소 이동’을 통한 길고양이 근거리 이주가 가능하다. ‘급식소 이동’을 통한 이주 방법은 강제 이주가 아닌 자발적 이주를 유도하는 방법으로써 고양이들을 인근 이주 예정지로 가장 안전한 영역 이동을 도모할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인근에 이주 예정지로 적합해 보이는 곳이 있다면 이주 예정지의 서식 현황은 어떠한지 TNR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본 뒤 이주 예정지로 확정한다. 붐비는 차도와 낭떠러지 등을 피하여 이주 예정지를 향한 안전한 급식소 이동 경로를 설정하고 전략을 세운다. 집중 TNR을 실시하며 급식소 이동을 통한 근거리 이주를 실행한다.

아래는 여러 물리적 약조건 속에서도 고양이 스스로 근거리 이주 우선 원칙이 적용된, 2020년도의 다양한 사례들이다.



높은 벽의 아파트 담장



이미 철거가 시작된 현장, 케어테이커들의 자체적인 TNR도 이루어지고 있었음



고양이 이주를 위해 공식 급식소 설치

사례 2

Q. 재개발 지역 주변이 전철과 육교 등으로 막혀 있어요.



지역 특징

- 동 4차선 도로와 길고양이에 호의적이지 않은 아파트
- 서 전철과 육교
- 남 전철과 지하도
- 북 전철역과 도로

A

해당 지역은 전철역과 철로로 둘러싸여 있고 주변 아파트는 길고양이에 대해 혐오감을 드러냈던 곳도 있었다. 지하도를 통해서도 고양이와 이동한 흔적들이 보이긴 했지만 지하도와 연결된 맞은편 아파트 단지 및 주변 일대는 길고양이에 대한 민원이 많은 곳이라 이주를 위한 급식소 설치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이주 예정지로 적합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 철로 위의 육교는 고양이에게 위험할 것 같지만 의외로 고양이들은 육교를 이용해 이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육교 계단 초입과 중간에 임시 급식소를 놓고 매일 몇 미터씩 맞은 편 방향으로 급식소를 이동 시키도록 하였다.



이미 사람의 이주가 90% 진행된 상황



재개발지역 주변 철로와 육교



넓은 도로와 도로 진입로 부분



사람의 이주가 끝난 재개발지역 급식소에 설치 된 포획틀

사례 4 Q. 재건축 지역 주변에 근린공원 2곳이 있고 고속도로로 막혀 있어요.



지역 특징

- 동** 고속도로로 막혀 있음
- 서** 상가 밀집지역과 왕복 5차선 도로
- 남** 근린공원과 초등학교, 곧 재개발이 이뤄질 아파트
- 북** 근린공원, 재개발 계획이 없는 아파트 상가, TNR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파트

A

해당 지역은 재건축 지역으로 북쪽과 남쪽의 근린공원으로 자연스러운 이주가 가능한 지리적 요건을 갖춘 곳이었다. 해당 구청 공원 녹지과의 비협조로 공식 급식소 설치에 어려웠지만 이주 목적의 임시 급식소 설치에 가능했다.

북쪽의 아파트는 TNR이 90% 이상 이루어진 곳이라 재건축 지역의 길고양이 TNR을 한 후 밥자리 이동을 통한 자연스러운 이주가 가능했다. 아파트 외곽의 근린공원 두 곳에도 임시 급식소를 설치하여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도록 유도했다.



재건축 지역 옆의 근린공원



고양이들이 자유롭게 다니는 또 다른 근린공원

2

차선책으로서 '계류장'을 통한 이주 사례

계류장의 기능과 기능수행을 위한 최소 사양, 그리고 필요성

- 단기간에 영역 이동이 불가능한 길고양이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
- 안전지역 내 환경 및 동료 고양이들에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임시로 고양이들을 계류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 추후 길고양이들이 자연스럽게 지역에 적응하거나, 안전 지역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동안 계류하기 위함
- 계류장 외 길고양이들에게도 계류장 내에 계류되는 고양이들의 존재를 인식하고 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능을 충족할 수 있는 시설
- 상기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양'으로 '최단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
- 계류장을 설치하는 곳의 환경에 영구적인 변화를 주거나, 환경에 조금의 손상도 가하지 않기 위해 땅에 지주를 박거나 시멘트 등 없이 동물이 탈출할 수 없는 최소한의 설비

영역동물인 길고양이 '이주'는 서식지 재개발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 보호조치 목적이 아니라면 함부로 시도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혐오 민원 때문에 고양이를 눈앞에서 치우겠다는 의도로 길고양이를 무단 포획하여 제3의 장소에 방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해당 고양이의 사망을 야기하는 근거 없는 동물학대 행위이자 정당한 사유의 안전한 이주 방법도 아니다.

도시정비구역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같은 피치 못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제일 권장되는 이주의 방법은 제 때에 밥을 주는 자리 즉 ‘급식소 이동’을 통하여 길고양이 스스로 안전한 곳으로 이주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반면 ‘계류장’을 통한 이주는 ‘급식소 이동’을 통한 자발적 이주가 불가능한 경우의 차선책으로서 일종의 강제 이주 방법에 해당된다.

‘계류장’을 통한 이주는 이주 예정지 가운데 적절한 곳에 계류장을 설치하고 길고양이를 그곳에 1-2개월 정도 계류시킴으로써 이주 예정지에 강제로 적응시키는 과정이다. 계류장 안의 고양이에게는 새로운 지역에 대한 정보 획득 및 적응의 시간을 주는 한편, 계류장 밖의 고양이에게는 계류장 내 고양이의 존재를 인식하고 서로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임시 시설인 계류장은 주변 환경에 영구적 손상을 가하지 않으면서 내부의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누군가 계류장 내 동물을 해코지 할 수 없도록 사전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먹이와 물, 숨집과 화장실이 있는 계류장이 있는 동안 고양이들을 관찰하며 특이사항을 체크하고 돌발 상황에 대처하며 매일 계류장에 밥을 주고 청소할 수 있는 관리자가 필요하다.

계류장은 임시 계류하는 고양이들 간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공간 배치와 수직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면 좋다. 방사 시기가 되면 계류장 문을 열어두되 계류장 내 먹이와 물 공급은 밥이 줄어드는 양을 관찰하며 모든 고양이들이 나간 뒤에도 한동안 지속한다.

차선책으로서 ‘계류장’을 통한 이주는 강제 영역이동에 대하여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를 길고양이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방편이며, 새로운 환경에서 모든 고양이의 생존과 정착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계류장을 통한 적응 기간을 두는 편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생존율을 높이는 것은 확실하다. 또한 계류장을 통한 강제 이주는 계류장 입지 선정부터 계류장 철거에 이르기까지 이해당사자간 조율이 필요하며 계류장 운영을 통한 고양이 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방사 이후에도 관찰과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다음은 차선책으로서 ‘계류장’을 통한 이주를 실행한 카라의 2016년도 사례들을 Q&A로 재구성해본 것이다.

사례 1_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3단지

Q. 대부분은 급식소 이동을 통하여 근거리 이주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곧 철거될 아파트 지하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하는 고양이 10여 마리가 단지 내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철거가 임박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영역이동에 실패한 일부 길고양이들은 심각한 구내염을 앓는 상태이거나 외톨이 등 약한 개체들이었다. 철거가 임박해도 아파트 지하 등지에서 꼼짝 않는 개체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고, 이주 예정지의 안전지대에 이들을 강제 이주시키기 위한 계류장을 임시로 설치하였다. 재개발 철거 예정지 바로 옆이기도 했으며 자연 이주가 성공했다면 도달했을 곳이기도 했다.

원 서식지에서 떠나지 못하는 남겨진 길고양이들을 포획하고 영역을 공유하던 고양이들끼리 배치를 고려하여 공원 내 인적이 드문 장소에 임시 계류장을 운영하며 관할 지자체에 협조를 구했다. 해당 구청 내 부서간 업무소통 미비, 공원녹지과의 비협조적 태도 등으로 중간에 예고도 없이 계류장 자체가 강제 철거되는 큰 소동을 겪기도 하였다. 해당 구청의 강제 철거 과정에서 계류장 내에 있던 고양이 1마리가 행방불명 되기도 했다.

나머지 고양이들의 안부를 확인한 카라는 해당 구청에 항의하며 동일한 장소에 임시 계류장을 다시 설치하였고, 해당 고양이들을 다시 계류시켰다. 이러한 노력 끝에 드디어 고양이들의 이주 예정지 방사까지 완료되어 임시 계류장을 자진 철거할 수 있었다. 해당 고양이들이 이주 예정지에 정착하는 과정은 급식소를 운영하는 케어테이커들이 모니터 하였다.

사례 2_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2단지

**Q. 이미 공사가 시작된 현장이고,
급식소 이동을 통한 영역이동 시기를 놓쳤습니다.**

**아직 공사장을 떠나지 못한 고양이들이
10여 마리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철거가 다 끝나고 아파트를 짓기 위한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위험한 현장이었다. 남아있는 10여 마리 고양이들은 몇몇 주민이 공사장 방벽 아래로 밀어 넣어주는 사료에 의존해 살며 공사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언제까지 위험한 공사판에서 살 수는 없는 일이었다.

해당 현장은 재개발이 예정되었던 과거에 80여 마리의 고양이가 서식중이었으며, 인근 1단지에 포획되어 바로 방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이때 방사된 80여 마리의 고양이들 중 30여 마리는 다시 찾길을 건너 2단지로 돌아왔고, 나머지 50여 마리 중 1단지에서 목격되고 있는 고양이는 당시 10마리가 채 되지 않았다.

2단지에서는 수십 미터 땅을 파는 지반공사가 시작될 무렵이었다. 이 경우, 카라는 자연스러운 영역이동의 시기를 놓친 채 위험한 공사장에 여전히 남아있던 10여 마리 길고양이들의 보호 차원에서 차선책으로 '계류장'을 통한 강제 이주 방법을 사용했다.

이주 예정지는 공원 쪽이었다. 시공사 및 조합 측과 협의하여 공원 쪽으로 난 공사장 방벽 외부 노는 땅에 임시 계류장을 설치하고 카라가 계류장 운영의 전적인 책임을 지기로 했다. 카라는 밤샘 포획 작업을 통해 위험한 공사장을 오가며 살아가던 고양이들을 포획하여 임시 계류장에 계류시킨 뒤 2개월 지나 방사하고 3개월 지난 시점에 계류장을 철거하였다. 지역 케어테이커에게는 공사 현장에서 되도록 멀리 먹이를 주게 함으로써 해당 고양이들이 새 터전을 잡아가도록 했다.



46



개포주공A의 고양이들

고양이들이 필요로 하는 생존 정보와 사전 보호 활동

- 몸을 은신하거나 먹이와 물을 공급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사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고양이들은 위험지역을 떠나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영역 이동을 결행해 생존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특정 지역에 아주 짧은 기간에 고양이들이 밀집하여 스트레스가 유발됨으로써 질병이 발생하고 복지가 훼손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전에 고양이들의 중성화 수술과 질병치료 및 예방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



플라스틱박스, 종이 상자, 스티로폼 단열재를 이용해 만든 쉼터

개포주공 2단지 - 건설사와의 미팅 (카라 x 재개발조합 x 건설사)

협약 내용

1. 가림 벽 외부 쪽 공터의 가림벽면에 붙여 계류장 설치
2. 계류장 내부에 건설사측에서 먹이주기 활동 3개월 지속
3. 3개월 이후에는 계류장 외부로 건설현장에서 먼 지역에 먹이주기 활동 3개월 지속하여 고양이 들 확산 유도

협약 내용 실시를 위한 사전 확인 내용 및 카라의 지원 사항

1. 공사장에 남아 있는 길고양이들의 개체수 확인
확인 방법: 5일간 3개 급식소의 사료 소모량을 각각 체크한 후 합산하여 추산(세 곳 중 두 곳은 기존에 있던 급식소이고, 한 곳은 추후 계류장이 설치될 예정인 공사장 외부의 상대적으로 안전한 공간으로서, 이미 이 지역으로 확산해 온 고양이들이 먹이 급여를 위해 위험한 공사장을 가로질러 먹이를 구하러 기존 급식소로 오가는 것은 아닌지 동시 확인)
2. 공사장에 남은 고양이들의 포획 및 보호 방안 강구
3. 불가피한 개체들에 한해 포획 후 계류장에 임시 계류 후 방사
4. 포획된 개체들에 대한 의료 지원과 사료 등 지원 실시



2단지 계류장 모습



2단지 계류장 내부



2단지 계류장 내부



3단지 계류장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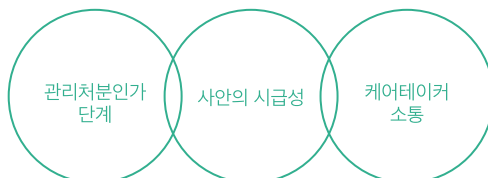


3단지 철거 예정 당일, 공사 내 고양이들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활동가들

1

2020 서울시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 시범사업의 결과

서울에만 약 560여 개에 이르는 도시정비구역이 있다. 본 사업의 대상지 선정은 신청서 내용 정보의 충실한 기재를 바탕으로 카라의 현장조사 및 케어테이커 면담, 그리고 아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뤄졌다.



도시정비구역의 현장의 재개발 단계, 환경적·지리적 특징이나 고양이의 서식 현황 외에도 케어 테이커의 의지와 소통, 그리고 조직력은 성공적인 이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카라는 케어테이커 들과 2차례 이상 간담회를 열고 현장조사를 진행하면서 함께 공동의 활동계획을 수립하였다. 현장조사 결과 극복해야 하는 난관은 있을지언정 다행스럽게도 대상 지역 모두 길고양이 스스로 급식소 이동을 통한 근거리 이주가 가능한 여건이었다. 이 중에는 2021년 1월 현재까지도 아직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도 있어 길고양이 이주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0 서울시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활동을 통한 TNR 및 치료 개체 수 (단위: 마리)							
지역	중성화수술	치료	기중성화	체중미달	유기묘 (입양보냄)	임신묘	합계
봉천동	27		1	1		2	31
청담동	17	2(사망)					19
홍은동	6					1	7
방배동	8	4	1	4			17
중화동	11	8		1	1		21
휘경동	24	23(사망)	1				48
합계	93	37	3	6	1	3	143

*참고

- 사망 2개체는 치료를 위한 입원 중 신부전, 암 등으로 각각 사망
- 기중성화 3개체는 검진 및 접종 후 제자리 방사
- 체중미달 6개체는 카라의 TNR 최소 체중 기준(2.5kg)에 따른 것이며 검진 및 접종 후 제자리 방사
- 임신묘 1개체는 출산 임박으로 케어테이커가 임시보호하며 출산 후 새끼들은 입양, 어미묘는 중성화. 임신묘 2개체는 임신 초기로 중성화



서울시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 시범사업을 주관한 카라는 총 11개의 사업 신청 지역 중 6곳의 대상 지역을 선정하였다. 대상 지역별 재개발·재건축 상황과 특징, 사업지의 장점 등을 정리해 보았다.

내용/지역		관악구 봉천 4-1-2 재개발	강남구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서초구 방배 14구역 재건축
정비구역면적		55,512㎡	61,978㎡	27,460㎡
중성화율	신청지	70% 총 개체수 약 60마리	40% 총 개체수 약 30마리	40% 총 개체수 약 30마리
	이주지	이주지 아파트: 20% 정도	이주지 아파트: 80%이상 근린공원: 알 수 없음	알 수 없음
케어테이커 그룹		케어테이커 2명과 이주 지역의 일부 케어테이커	케어테이커 5명, 청담동 직장인 케어테이커 1명	케어테이커 5명 이상 "서초 캣맘 협회"
시범 사업 투입 시기		철거가 시작되고 나서 투입, 관악구청 상반기 TNR 지원은 끝난 상태	거주자의 이주 마무리 시점에 투입, 공격적 TNR이 필요	거주자의 이주 계획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 재개발 진행 중인 5구역의 펜스가 허물어지면 14구역에 펜스 칠 예정
이주 예정지		관악 드림타운아파트로 이주(중성화 거의 안 됨)	아파트 바로 옆 자이아파트(급식소 3개 있음)와 근린공원	서쪽 방향 인근 주택가와 녹지대
이주 예정지 급식소 개수		7개 이상	7개 이상	거주자의 이주 계획이 없는 상황(재건축지역 급식소: 5개 이상)
사업지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소 이동을 통한 고양이 이주 가능 지역 - 재개발 지역의 고양이 TNR이 70%정도 이루어진 상태 - 이주 예정 지역이 사업에 적극 협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소 이동을 통한 고양이 이주 가능 지역 - 아픈 고양이나 새끼고양이들의 계류장 설치, 돌봄이 가능 - 재건축 조합의 적극적인 사업 협조 - 건설사의 길고양이 통로 위치 등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소 이동을 통한 고양이 이주 가능 지역 - 지역 케어테이커들의 결속과 활발한 TNR 활동
사업지 아쉬운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센터가 길고양이 이주에 필요한 임시 급식소 설치를 허락하지 않음 - 이주 예정지 일부 케어테이커의 중성화 수술 필요성 인식의 부재 - 이주 예정지 케어테이커가 주민 시선을 피해 밤에 급여하다보니 급식소, 거울집 등을 깨끗이 관리하기가 어려움 - TNR 전달과 당일, 먹이 급여 중단에 대한 협조가 소극적이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린공원에 공식급식소 설치 는 공원녹지과가 허락하지 않음. 임시급식소를 설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동네가 모두 재개발 지역(다행히 사람 이주와 철거는 기한이 남은 상태) - 조합측은 도시정비가 아직 진행 상황이 아니어서 간담회나 현수막 게시 등 뚜렷한 협조 안 됨
이행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신청해주신 케어테이커와 함께 집중 TNR과 치료, 급식소 이동을 통한 고양이 이주 진행 - 공식 급식소 설치 후 깨끗한 관리를 약속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 TNR, 고양이 이주와 병행하여 근린공원 2곳에 급식소 설치 - 주민의 민원으로 1곳은 다른 곳에 위치를 옮겨서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 TNR 및 치료 지원

관악구 봉천동 재개발 지역의 경우 케어테이커 두 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신청되었으며 부분 철거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TNR이 시급했다. 2019년 서울시 취약지구 중성화 지원 사업의 결과, 이미 케어테이커들이 급식소 이동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TNR지원과 이주가 병행되었다. 이주 예정지는 아파트의 규모가 크고 길고양이 개체수가 많음에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케어테이커가 소수에 그쳤으며 TNR에 대한 견해차이가 존재했다. 길고양이 이주를 돕기 위한 급식소 이동 시에는 주민센터의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길고양이 상생에 대한 마을의 공감 형성이 절실했던 사례이다. 한편 이주 예정지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현수막 게첨, TNR 안내문 부착 및 안내 방송 등 적극적인 협조가 가능했다.

강남구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지역의 경우 이주 예정지로 이동하는 주요 경로에 근린공원 2곳이 자리잡고 있어 공원 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강남구청 공원 녹지과로부터 공원 급식소의 설치 허가를 받지 못했지만 서울시와 논의를 거쳐 길고양이 이주가 끝날 때까지 임시 급식소를 두는 것으로 협의하였다. 재건축 조합측은 간담회 참여, TNR 알림 및 상가 도로 내 자동차 서행 요청 현수막 게첨, 케어테이커들의 요청 사항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었고 조합의 홍보 자료에 본 사업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서초구 방배동 재건축 지역은 '서초 캣맘'이라는 케어테이커 그룹의 일원들이 함께 사업 진행을 도왔다. 방배 14구역은 아직 사람의 이주와 철거가 이루어지려면 2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곳이어서 해당 지역과 주변의 길고양이 TNR을 진행하였다. 지역 내에 계류공간이 1곳 있어 케어테이커 자체적으로 TNR 포획을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구내염 등 아픈 고양이는 치료 후 계류공간에서 돌보다가 제자리 방사되기도 하였다.

내용/지역		서대문구 홍은제3구역재개발	중랑구 중화재정비구역재개발	동대문구 휘경3재정비구역재개발
정비구역면적		36,220㎡	44,725㎡	65,338㎡
중성화율	신청지	60% 이상 총 개체수 약 50마리	70% 이상 총 개체수 약 20마리	60% 이상 총 개체수 약 70마리
	이주지	알 수 없음	알 수 없음	이주지 아파트: 50%이상 이주지 주택가: 알 수 없음
케어테이커 그룹		1명	“중랑 길고양이친구들” 회원 3명	“휘경냥이” 회원 6명 이상
시범 사업 투입 시기		이미 펜스가 쳐지고 철거가 시작 된 시점	거주자의 이주가 거의 끝난 시점	거주자의 이주가 거의 끝난 시점
이주 예정지		산을 제외한 주변 인가	북쪽의 주택가 (급식소가 4개 있음)	서쪽의 육교와 아파트 (급식소가 2개 있음)
이주 예정지 급식소 개수		케어테이커가 고정 급식소를 놓지 않고 밤에 밥을 주고 빼는 상황	4개 이상	5개 이상
사업지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밥을 주는 위치 이동을 통한 고양이 이주 가능 지역 - 고양이에게 밥을 줄 때 그릇을 이용하여 각각의 위치에 주며, 밥을 모두 다 주고 난 후 다시 돌아가 그릇을 바로 치우는 먹이 주기 활동(총 소요시간 3시간, 민원 해소를 위한 노력) - 길고양이 보호 활동에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신 홍은 1동의 동장님 - 60% 이상의 재개발 지역 중성화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소 이동을 통한 고양이 이주 가능 지역 - 케어테이커의 재개발 고양이를 위한 꾸준한 관심과 노력 - 구청과 시청 등에 적극적으로 길고양이 보호 관련하여 건의를 하고 개선점을 찾으려 노력하며, 길고양이 정책 수립 활동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열성적인 케어테이커 - 케어테이커의 노력으로 고양이에 대해 우호적으로 바뀐 재개발 조합 측 구성원 한 분 - 0%이상의 재개발 지역 중성화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소 이동을 통한 고양이 이주 가능 지역 - 재개발 지역의 빈 집(공사)을 계류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케어테이커가 조합측과 적극적으로 소통함 - 아픈 개체와 입양 보낼 개체, 새끼 고양이를 위한 계류장이 각각 존재 - 역할 배분과 결속이 잘되는 케어테이커 - 케어테이커의 활발한 입양 홍보 활동 - 60% 이상의 재개발 지역 중성화율
사업지 아쉬운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케어테이커 1명의 고군분투 - 이미 철거가 진행되는 급박한 상황에서 카라가 투입됨 - 북쪽의 도시자연공원 부근에서 유기견들이 출몰하여 길고양이도 상해를 입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고양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재개발 조합 - 구내염 등 질병을 앓고 있는 고양이들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잦은 길고양이 학대 추정 의 상해 및 살해 사건 현장 - 길고양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재개발 조합 - 사람에게 친화적인 길고양이들이 매우 많았음(학대의 대상이 되기도)
이행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라의 집중 TNR 지원 - 지역 케어테이커들의 결속력 필요 - 재개발 지역 주변의 지속적인 TNR과 돌봄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와 집중 TNR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라의 집중 TNR과 치료 지원 - 지속적인 고양이 입양 홍보 - 학대 추정 사체 발견시 증거 수집, CCTV 설치, 경찰서의 협조 구함(순찰차량 등)

서대문구 홍은동 재개발 지역은 초기 선정된 지역은 아니었으나 케어테이커 한 명이 밥을 주고 TNR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재개발 지역 주변의 공원에 유기견(소위 들개)이 출몰하여 길고양이가 부상을 당하고 죽기도 하는 등 절박한 상황을 차마 외면할 수 없어 긴급하게 투입된 사업이었다. 타 지역들보다 길고양이 관련 민원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안정적인 돌봄으로 TNR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중랑구 중화동 재개발 지역도 초기 선정된 지역은 아니었으나 소수의 케어테이커들이 이주할 지역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급식소 설치를 위해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노력함에 따라 사업 진행을 함께 할 수 있었다. 척박한 재개발 지역의 환경 탓에 구내염 등 질환을 앓고 있는 고양이들이 많아 치료 지원이 절실했다. 케어테이커들은 돌봄 활동에 그치지 않고 관공서 등지에 길고양이 보호 방안 및 관련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도 하였다.

동대문구 휘경동 재개발 지역은 케어테이커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공가를 활용한 임시 계류 공간(쉼터)에서 길고양이 돌봄과 치료 및 입양 활동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학대 의심자들이 있어 학대로 인한 상처 입은 고양이와 심지어 사망한 고양이 사체까지 발견되었다. 또한 구내염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고양이가 매우 많아 보다 적극적인 고양이들 치료와 TNR이 이뤄졌던 사업지이다.

이렇듯 도시정비구역의 길고양이 보호 활동은 다양한 난관이 있고 개인이 사적으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규모이다. 한편 도시정비구역의 특성상 사람들의 이주가 끝난 상황에서 지속적인 현장 돌봄이 이뤄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길고양이에 대한 케어테이커들의 꾸준한 관심이 요구된다.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를 위해 오늘도 전국 각지에서 수고하는 케어테이커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2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제도적 과제

지역 케어테이커를 위시한 민간 주도의 길고양이 돌봄 활동은 활발한 반면 이를 받쳐주어야 할 정책 및 제도적인 근거는 매우 부족하다. 공존을 위한 전국적 TNR 정책이 도입되어 시행 중이거나 재개발 난무로 인한 길고양이 생존 위협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 관의 적극적인 역할은 사실상 부재하며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당면 문제를 해결해 왔던 게 전부다.

우선 현행 지자체 TNR은 대규모 재개발 현장의 시급한 집중 TNR과 예방접종, 치료의 수요까지 제때에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현실이다. 일부 지자체 TNR의 경우, TNR 안전성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어 지자체 TNR을 안전하게 정착시키는 한편 도시정비구역 집중 TNR도 지자체 TNR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도시정비구역 TNR은 이주를 해야 하는 길고양이의 사정을 감안하여 중성화 수술뿐만 아니라 예방접종과 구충, 필요시 치료까지 포함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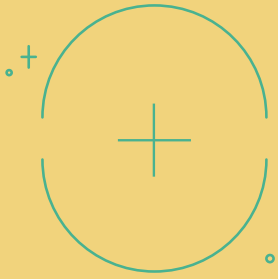
관공서마저도 동물보호 담당 부서를 벗어나면 길고양이에 대한 인지도가 현저히 떨어져 협조를 위한 설득이 필요했으며, 그 설득조차 용이치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척박한 환경에서 자체적으로 힘겹게 동물보호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동물보호 활동에 대한 협조는 커녕 동물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이 부서 간에도 불통으로 일관하며 상황이 악화된 적도 있다.

심지어 2016년에는 해당 구청 동물보호 담당과에 알리고 동물보호단체가 직접 관리 중이었던 길고양이 '계류장'이 도배된 안내판 표지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예고도 없이 같은 구청 공원 녹지과에 의해 강제 철거되는 사건이 발생, 재개발 공사 현장을 피하여 이주를 위해 계류되던 고양이들은 함부로 마대자루에 담겨져 제3의 장소로 옮겨지는 불필요한 사단이 나 카라는 동일한 장소에 다시 계류

장을 설치하고 고양이들을 데려와 이주를 마쳐 완수했다. 구청의 계류장 강제철거 당시 1마리가 행방 불명 되고 말았는데 관할 구청 공원 녹지과가 주도한 일이었다는 점에서 충격이었고 다시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다. 이 같은 관공서 인식미비 문제는 2020년에도 없지 않아 보호조치로서 길고양이 이주를 위해 임시 급식소 설치가 절실한 상황에서도 협조를 받기 어려웠다. 도시정비사업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동물보호지침 마련이 필요한 까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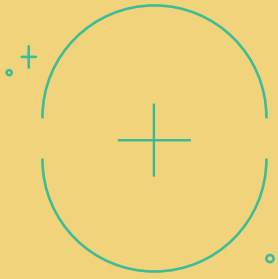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환경 영향 평가법 제2조 제2호). 재건축·재개발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사업의 규모는 도시개발사업(25만㎡이상) 정비사업(30만㎡이상)으로 되어있다. 서울시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이라도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통해 국가 환경영향평가 대상보다 작은 면적의 사업지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속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평가항목에 동·식물상·포유류-고양이로 분류되어 있으나 실제 평가에서는 사업시행에 따른 동·식물상 변화라는 측면에서 고양이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현실이다. ‘영향범위 내 법적 보호종’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도시정비구역이라는 개발 사업으로 인해 서식지에서 내몰려 위험한 환경에 놓이게 된 동물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다. 특히 TNR 후 영역동물로서 안정적인 급식소와 함께 정착을 도모해야 하는 시기에 인간에 의한 재개발로, 급식소 갈등으로, 동물학대 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길고양이의 사정이 안타깝다. 언제 터전을 잃을지 모를 생명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대책 수립과 함께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매뉴얼 수립 모두 철저히 요구된다. 또한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 확산되고 있는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보호 조례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연결되어 이제는 급식소 갈등을 뛰어넘어 길고양이가 공존의 존재로 인식되고 동물복지 증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용어설명

도시정비구역	노후한 건물을 허물고 재정비하는 일명 재개발 재건축 지역
관리처분인가	재개발 사업 진행 단계 중 하나 1. 기본계획수립 2. 안전진단 3. 정비구역지정 4. 조합설립추진 5. 조합설립인가 6. 사업시행인가 7. 관리처분인가 8. 철거신고 9. 착공신고 10. 일반분양승인 11. 준공인가
길고양이	도심이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
영역동물	일정한 영역 안에서 살면서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동물
케어테이커	길에 사는 고양이에게 밥과 물을 제공하며 돌보는 사람
중성화	번식능력을 없애기 위한 수술
TNR	trap(포획)-neuter(중성화)-return(제자리 방식) 길고양이를 인도적인 방법으로 포획하여 중성화수술 후 포획한 장소에 풀어주는 활동
TNRM	TNR에 M(maintenance, 유지 관리), 즉 '후 돌봄'이 추가된 개념
지자체 TNR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포획자(또는 케어테이커)가 TNR 대상 길고양이를 포획하고 지정병원에서 중성화수술을 한 후 제자리방사하는 제도. 현재 지자체 TNR이 전국적으로 시행중.



부록 1_

재개발지역

길고양이 보호 조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시행 2021. 3. 25.] [서울특별시조례 제7967호, 2021. 3. 25. 일부개정] 서울특별시(동물보호과)

제21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1. 시장 또는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시장 또는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중성화의 목적으로 포획한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 장소에 방사해야 한다. 다만, 길고양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5.>
3. 시장 또는 구청장은 유기동물로 구조되어 제 11조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난 길고양이의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구조 장소에 방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2항의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1. 3. 25.>
4. 시장 또는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효과적인 개체수 조절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목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생활공원 중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1. 3. 25.>

제24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1. 시장은 유기동물의 구조·보호·분양 및 동물 복지와 동물등록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자치구 또는 소속 기관과 동물보호센터, 동물복지지원센터 및 영업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1.>
2. 시장 또는 구청장은 유기동물의 구조·보호·분양 및 동물복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유기동물의 구조·보호·분양 및 동물복지와 관련된 교육·홍보·지원·위원회 등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원활한 수행을 위해 법 제4조제4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1. 9., 2020. 12. 31.>

서울시, 재개발시 길고양이 구조... 박원순 “길고양이와 공존해야”

민주주의 서울 접수된 시민 제안에 박원순 직접 답변
박원순 “14만 마리의 길고양이와의 공존이 필요하다”
도시정비구역 내 길고양이 보호 매뉴얼 등 제도 마련
재개발 재건축 철거 전 길고양이 사전 보호 방침 세워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개발·재건축시 길고양이 등 보호를 통해 동물과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9일 민주주의 서울(<http://democracy.seoul.go.kr>)에 올린 영상에서 “서울시민의 곁에 살고 있는 약 14만 마리의 길고양이와 공존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먼저 도시정비구역 내 길고양이 보호 매뉴얼과 길고양이 민원 처리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 동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동물보호 활동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길고양이 보호 방법 의견을 수렴한다. 시는 또 재개발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 사업시행자가 기존건축물 철거시기를 통보하도록 해 철거 이전에 길고양이, 유기동물 등을 사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의회(보건복지위원회)는 연말까지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개정을 추진해 도시정비구역 내 동물보호와 반려동물 유기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시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단체와 협력해 동물보호 집중 관리지역을 선정, 내년 부터 동물보호지원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해당 지역에 사는 길고양이들을 집중 중성화해 개체

수가 늘어나지 않게 한 후 임시보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유기동물의 치료와 입양, 교육을 위해 설립된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추가 조성하고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의 이번 발언은 민주주의 서울에 접수된 시민 제안에 대한 답변이다.

민주주의 서울에 올라온 시민 제안 중 500명 이상 공감을 받는 경우 온라인에서 30일간 공론장이 개설된다. 공론에 5000명 이상이 참여하면 서울시장이 답변해야 한다. 이번 답변은 지난해 12월 보건소 난임주사 제안 이후 박 시장이 직접 답변하는 두 번째 사례다.

이번 사안은 지난해 12월에 접수된 '서초구 재건축 단지의 길고양이들을 도와 주세요'라는 제안에서 시작됐다. 해당 제안은 민주주의 서울이 개편된 2017년 10월 이래 가장 많은 5659명의 공감을 얻었다.

이 제안에 '길 위에 살아가는 고양이 역시 우리와 공존해야 할 존재다', '재개발 재건축 현장의 생태 보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기회에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져서 동물보호 차원에서 범국가적으로 대대적인 제도의 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 등 의견이 게재됐다.

박대로 기자 2019.09.09. [출처: 공감언론 뉴시스]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시행 2020.12.31.]
(전부개정) 2020-03-16 조례 제 6488호
(일부개정) 2020-12-31 조례 제 6828호

제21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 ① 도지사는 길고양이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재건축·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
 2.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 ② 도지사는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경기도, 재개발·재건축 길고양이 관리 담은 동물보호 조례 시행

5년마다 동물복지계획 수립

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 길고양이 관리 사항을 규정한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를 지난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이 수차례 개정됐고 동물보호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함에 따라 기존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한 것이다.

우선 동물보호와 생명존중,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정착에 대한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5년마다 경기도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했다. 또 길고양이를 포획 후 중성화해 다시 포획된 장소로 방사하는 내용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항목을 포함해 길고양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개체수를 조절하도록 했다. 특히 최근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터전을 잃는 길고양이 보호를 위해 재건축 재개발지역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해 관련 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맹견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입 금지 장소도 조례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등에는 맹견이 출입할 수 없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동물복지와 보호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발맞춰 이뤄진 것”이라며 “사람과 동물,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과 기르지 않는 사람 모두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1.01.]
(제정) 2000-12-28 조례 제 3672호
(일부개정) 2020-01-01 조례 제 6062호

제4조(동물의 구조·보호 등)

-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유실·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을 구조·보호조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수용하여 안전하게 구조·보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물이 이미 등록되어 있으면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그 동물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25>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하고 있는 동물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법 제17조에 따라 공고하고,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법 제18조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도시정비구역의 유실·유기동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구조하고 길고양이 개체 수 억제를 위한 중성화를 권장하며 임시보호소를 설치하여 보호할 수 있다.<신설 2020. 1. 1.>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 2020.09.30.]
(제정) 2004-04-22 조례 제 3928호
(일부개정) 2020-09-30 조례 제 6243호

제12조(정비계획의 내용)

- ④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동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정비구역 내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정비계획 수립 시 포함하도록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20. 5 .27.>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나는 재개발지역 고양이입니다”

이주하며 버려진 재개발지역은 전쟁터
동물보호, 도시정비 조례로는 전국 최초

최근 재개발지역에 사는 이들 길고양이를 보호하는 내용의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시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동안 재개발지역 길고양이를 둘러싸고 벌어진 이야기를 1인칭 시점의 ‘뉴스 요리’로 꾸며 봤습니다.

길고양이에게 재개발은 재난

나는 재개발지역 길고양이입니다. 처음부터 길고양이는 아니었습니다. 원망도 했지만 이제는 우리 가족이 말 못 하고 떠날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마음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헤어지며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처음 사흘은 울기만 했습니다. 밥도 없고, 물도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동네에 비슷한 처지에 놓인, 버림받은 고양이들이 꽤 있었습니다. 길고양이 선배들로부터 우리 마을을 사람들이 재개발 정비사업지구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길고양이에게 재개발지역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이 파편이 되어 사방에 떨어져 있습니다. 발에 상처를 입어 절뚝거리는 고양이가 많은 이유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며 음식물이 쉽게 상하니 병이 나기에 십상입니다. 물까지 귀해 탈수 증세를 보이는 우리를 도와준 캣맘이 없었다면 저도 벌써 무지개다리를 건넜을지도(반려동물의 죽음을 표현하는 말) 모릅니다. 스스로 이사를 할 생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역 동물’인 고양이는 떠나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걸고

떠난 몇몇은 일찍 자리를 잡은 고양이들의 텃세에 피 터지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고양이에게 재개발은 가족과 집이 송두리째 사라지는 재난입니다. 곧 닥쳐 올 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를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이대로 매몰되어 생을 마감해야 할까요. 혹시 운 좋게 새 아파트가 지어질 때까지 견디면, 새로 들어온 주민들은 우리를 받아들까요.

동네의 일원... 같이 살 수는 없나요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캣대디입니다. 재개발지역에서 데려온 고양이들을 집에서도 잘 키우고 있습니다. 길고양이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재작년부터였습니다. 해운대구 반여동 재개발지역으로 산책하러 나갔다가 5월까지 떠나라고 하는 공고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3월이었는데 갈 곳이 없다는 할머니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재개발지역을 떠나지 않으려고 쇠사슬에 몸을 묶고 버티는 분을 만났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여름이 되어 다시 가보니 다 떠나고 고양이들만 쓸쓸하게 남겨졌습니다. 반여동은 자연녹지가 근처에 있어 고양이들에게는 여건이 나은 편입니다. 동래 재개발 지역은 너무 처참합니다. 반여동도 그대로 놔두면 동래처럼 될 것 같아서 동물단체, 정당, 구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다 캣대디 한 분을 만나 고양이 밥 주는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도 잘 압니다. 하지만 고양이도 이곳에 오래 살았으니 동네의 일원입니다. 사람들이 재개발하며 고양이를 밀어내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같이 살 수도 있지 않나요. 길고양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싶습니다.

생명에 대한 책임감이 아쉬워

저는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장 남언욱 시의원입니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으로서 생명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요즘 세상에 처음부터 야생에 사는 고양이나 개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버린 거지요. 겨울철 밤늦게 집에 들어가며 길고양이가 눈에 밟혀 안고 가서 재운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비록 아내에게 혼은 났지만,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의 발로는 그런 게 아닐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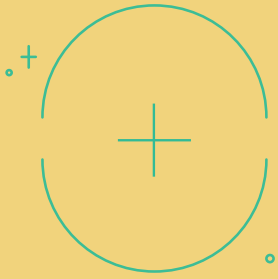
2018년부터 캣맘들이 찾아와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 현장에 가보니 공사 관계자들도 길고양이 문제를 안타까워하며, 제도적으로 개선해주시기를 바랐습니다. 처음 계획은 동물보호법에 길고양이 보호를 조례로 넣는 것이었습니다. 반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집 짓는 게 중요하지, 무슨 고양이 문제까지 신경을 쓰나. 심지어 그런 조례를 만들면 건설 경기를 위축시킨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방자치법에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발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위법이 있어야만 조례를 만들 수 있다니, 지방자치제도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비슷한 조례를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일 년 반 넘게 씨름을 하다 보니 동물보호법으로는 안 되더라도, 도시정비 조례로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길고양이 관리계획을 도시정비계획에 넣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들에게는 ‘재개발지역에 한번 가보자, 고양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다’라고 설득했습니다. 건축 최종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정비구역 내 동물 보호 계획을 세워야 하고, 부산시장은 동물 보호 계획을 정비 계획 수립 때 포함하도록 권고하는 조례를 발의해 결국 통과시켰습니다. 강제가 아닌 권고에 그쳐 다소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도 우리 사회의 시민의식이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도시 정비계획에 동물 보호를 조례로 넣을 수 있었습니다.

… 후략 …

박중호 기자 2020.06.13. [출처: 부산일보]



부록 2_

2021년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개정안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시행 2021. 3. 25.] [서울특별시조례 제7967호, 2021. 3. 25. 일부개정]

현행

제21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개정

제21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 ② 중성화의 목적으로 포획한 고양이는 포획장소에 방사해야 한다. 다만, 길고양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장소를 정하여 방사할 수 있다.(재개발, 재건축 지역)

신설

-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효과적인 개체수 조절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목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1항 제2호 생활권 공원 중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다.

재개발 현장의 고양이와 활동가들













2020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활동 사례집

발행처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전진경
주소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 122(서교동 457-5)
전화 02-3482-0999
홈페이지 www.ekara.org
이메일 info@ekara.org
발행일 2021년 4월 27일